

제공일자	2015. 2. 5(목)	담당자	강성호 연구위원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2-3775-9033
			총2매

제목 : 중산층이 은퇴 후 필요한 소득대체율은 71.4%

- 연금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22.3%
-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추가적인 연금소득 확보 절실

□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강성호 연구위원은 『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, 그리고 과제』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고령화리뷰 2014년 제4호 테마진단).

□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리스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·사적 부문 모두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노후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- 공적부문은 추가적 복지재정 투입 여력 약화로, 보험산업은 위험률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움.
- 이러한 현상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겪는 노후생활의 어려움 중 경제적인 어려움(38.6%)*이 가장 크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.

* 통계청(2013), 2013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조사된 내용임.

□ 노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노후준비 수준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.

- 즉,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필요 노후소득 수준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.
- 이에 중산층 노인 가구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노후준비의 목표수준(필요소득대체율*로 정의)으로 설정하고 소득계층별로 이를 추정함.

* OECD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70% 수준은 빈곤층과 고소득층도 포함된 평균 관점이므로 이상치(outlier)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산출함.

□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**185.1%**, 중산층 **71.4%**로 추정되나 보유하고 있는 소득수준으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음.*

- 저소득층은 자신이 현재 얻고 있는 소득의 **1.85배** 정도 되어야 중산층 노인 가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
- 중산층 이상 노인 가구는 평균적으로 현재의 노후소득으로 필요소득 대체율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, 현실적으로 **중산층의 46.6%도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못한** 것으로 분석됨.

*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시자료(2013년 기준)를 활용하여, ‘중산층 노인 가구의 소비수준’/‘소득계층별 노인 가구의 소득수준’으로 산출함.

□ 노후준비를 위한 필요소득 항목으로 연금소득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.

- 연금소득으로 **충당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**은 빈곤층 **40.2%**, 중산층 **22.3%**로, 연금소득만으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충족하려면 각각 **144.9%, 49.1%**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장기적으로 **공적연금이 25~30%**(평균소득자 기준)를 충당하여 연금소득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공적연금의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함.

□ 따라서, 공적연금 확대의 한계를 고려할 때 사적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**노후소득 확보**가 절실함.

- 특히,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에 대한 **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급**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(예, 독일의 리스터연금*).
- * 독일은 연방금융감독청에서 인증하는 연금상품(리스터연금)에 한해 가입 시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
- **중산층**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상향조정,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조치 마련이 요구됨.

첨부 : 테마진단 “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, 그리고 과제”. 끝.